

# 동해안 산불관련 언론스크랩(2-2)

[동해안산불] 소방헬기 · 비상소화전 · 부정언론

江原日報

2022년 03월 06일(일)  
사 회

江原日報

2022년 03월 07일  
06면 (사회)

## 초대형 헬기 배치 8년째 지지부진 ... 내년 도입도 차질

강원도가 해마다 대형 산불로 고통 받고 있지만 지역의 숙원인 초대형 산불진화헬기는 예산을 확보해두고도 수년째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강릉, 동해, 삼척, 영월, 경북 울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도 강원도에 초대형 헬기가 배치돼 있었다면 효율적인 초동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는 2014년부터 정부에 270억원 상당의 초대형 헬기의 동해안 상시 배치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매년 묵살됐다. 2018년 4월 고성·속초 산불로 영서 북부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입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헬기 도입을 요청했으나

수년만에 가까스로 예산 확보에도 정부 국산 헬기 활용 가능성 요구 러시아 입찰 가처분 신청에 지연

도소방본부 "2차 입찰 실패하면 수의계약 하더라도 조기에 도입"

여전히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1년6개월가량 표류하다 2020년 하반기 기어이 국비 115억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현재 강원도가 보유한 2대의 소방헬기는 답수량이 1,500ℓ에 불과하지만 초대형 헬기는 최대 4,000ℓ까지 담수가 가능해 효율적인 산불 대처의 유일한 대안이다. 그러나 재원을

확보한 지 2년가량이 흐른 지금도 온갖 잡음으로 헬기 도입시기는 불투명하다.

정부가 국산헬기인 수리온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볼 것을 요구해 지난해 강원도의 헬기 조달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가까스로 지난달 헬기 입찰을 공고했지만 러시아의 헬기 제조업체가 입찰과정의 불공정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또다시 입찰이 중단됐다. 이에 춘천지법은 지난 2일 러시아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강원도 입장에서 는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말았다. 더욱이 2차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러시아 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입찰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는 미국 제조사 1곳 뿐이라 입찰 자체가 성사되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내년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문순 지사도 헬기 도입 지연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최 지사는 지난 5일 삼척 산불현장을 찾아 "말이 (헬기) 전진 배치지 진화 헬기가 산불 현장까지 투입되는 데 두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강원도가 초대형 헬기를 반드시 운영해야 대응이 가능하다. 2차 입찰에 실패하면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반드시 조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3.5\*11.0)cm

# [강원 또 초대형 산불]"산불진화용 대형 헬기 도입 서둘러라" 여야 한 목소리

수년째 사업 추진 늦어져 지적



◇권성동 의원 ◇이광재 의원

속보=강원도의 숙원인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도입이 수년째 지연(본보 7일자 5면 보도)되자 정치권이 산불진압헬기 도입에 한목소리를 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지만 산림피해 규모와 이재민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반복되는 산불,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야간 화재진압헬기 등 특수장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압선과 바람으로 인해 야간 진압이 매우 어렵다. 헬기 및 특수장비의 수입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자체 제작 가능토록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불이 나면 산림청 소관, 민간 피해가 나면 소방청 소관, 산불대응 및 피해복구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여러 정부 조직이 함께해야 한다. 이원화된 대응조직을 통일하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상시적 국가 조직 체계를 짜야 한다"고 했다. 또 "민물 저장탱크를 이용한 소화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가 없는 산림 인접 마을에 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과학적 연구에 기초해 해수를 소화용수로 끌어오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도 대형 헬기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었다. 지난 5일 강릉 산불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현장을 점검한 권 의원은 "강원도소방본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의 신형 헬기 구입예산 270억원으로 조속히 강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목적 소방헬기를 선정·구매해야 한다"며 "동해안의 대형 산림화재에 빠르게 대응하고 험준한 산악지역의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선영기자

# "헬기 없나요"...초대형 헬기 도입 지연 뼈아팠다

강원소방, 국산 수리온 활용 검토·해외 업체 가처분에 발목 잡혀



울진·삼척, 강릉 성산과 옥계, 동해, 영월 등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진화 헬기가 분산되다 보니 진화는 더뎠다. 헬기 부족으로 먼발치에서 불길만 쳐다본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은 나흘 내내 계속 반복됐다. 삼척 산불 지역에서는 지난 6일 헬기 6대를 띄울 예정이었으나 오전 10시가 되도록 헬기가 1대도 보이지 않자 현장에서는 "헬기가 다 어디로 갔느냐"는 불멘소리가 쏟아지기도 했다.

강원도에 초대형 헬기가 있었다면 초동조치 및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견해다.

7일 강원도와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산불의 효율적인 초동진화를 위해 담수 용량 3천L(리터)·이륙중량 9천kg 이상의 다목적 초대형 헬기 도입이 추진된 것은 2018년 4월부터다. 강원소방이 보유 중인 인명구조용 소방헬기 2대는 담수 용량이 1천500L로 적어 산불 초기대응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2017년 강릉·삼척 산불에 이어 2018년 삼척·고성 대형산불로 축구장 면적(0.714ha) 2천252개에 달하는 1천 608ha의 산림과 79채의 건물이 잿더미가 되는 등 산불로 인한 상처가 반복되자 초대형 헬기는 필요를 넘어 절실한 상황이 됐다.

이에 도는 2020년 2월 국비 115억 원과 도비 155억 원 등 총 270억 원의 도입 예산을 확보했다.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초대형 헬기 도입은 국내외 여러 요인으로 수년째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먼저 국산 헬기인 수리온의 활용 가능성을 따져볼 것을 정부가 요구하면서 강원도의 헬기 조달 계획은 한동안 멈춰섰다.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5월 헬기 제원을 확정하고 국내 수리온이 아닌 외자 구매로 선회한 뒤 올해 1월 입찰공고까지 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의 헬기 제조업체가 발목을 잡았다.

이 업체는 지난달 15일 '특정 기종에 유리한 소방헬기의 입찰 공고를 중지해 달라'며 춘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입찰 공고 마감일(3일)을 넘기면서 초대형 헬기 도입 입찰은 유찰됐다.

강원소방은 이달 중 재입찰 공고를 내 초대형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작 기간이 81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2024년에나 도입·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화재가 119에 가장 먼저 신고되는 만큼 초대형 헬기가 배치돼 있었다면 '골든타임' 확보와 초동진화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대형산불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초대형 헬기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원 5곳 동시 산불...중대형 헬기 도입 지연 뼈아파



울진·삼척 산불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 지역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산불 피해 규모로는 역대 두 번째인데요. 초동 대응 한계를 드러내면서 강원도의 대형 헬기 도입 지연이 뼈아프단 지적입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강원도 삼척으로 넘어갔습니다. LNG 생산기지 인근 고포마을까지 불길의 접근하자 대형 폭발 사고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이튿날인 지난 5일 새벽,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역시 강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졌고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강원지역에선 삼척을 비롯해 강릉 성산과 옥계, 동해, 영월 등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났지만 진화헬기 부족으로 피해가 더 컸습니다. 여러 곳에 진화헬기가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헬기 부족으로 발만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강원도에 중대형 진화헬기 도입 지연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 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강릉·삼척 산불에 이어 2018년 삼척·고성 산불 등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강원도는 중대형 헬기 도입을 추진했고 2020년 2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헬기 도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부 요구로 국산헬기인 수리온 도입을 검토하면서 계획은 한동안 지연됐고, 이후 외국 헬기제조업체의 가처분 신청으로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법원이 입찰 조건 불공정을 이유로 제기된 입찰공고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공고 마감일을 넘기면서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강원소방본부 관계자> "3월에 재공고를 해서 810일 제작 소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2024년 초에 도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죠."

한편 전문가들은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종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문현철 / 한국산불학회 회장> "야간 운항이 가능한 기종이 급선무이고 계곡, 송전선 등이 많은 곳에 근접 비행해서 물을 살포해야 되는 조종환경을 고려한다면 초대형보다는 중대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 응봉산 넘어 백두대간 위협.."산림청이 진화헬기 보내 주지 않아"



<앵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울진-삼척 산불 지역에서 가장 우려되는 곳은 바로 응봉산인데요. 해발 천 미터의 험한 이 산이 뚫리면 백두대간인 경북 봉화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삼척과 경북 울진 경계에 있는 응봉산입니다. 화산이라도 폭발한 듯 군데군데 연기 기둥이 수직으로 피어오릅니다. 산불 피해 지역도 어제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가장 위험을 호소하는 곳은 덕풍계곡 인근 마을입니다. 연기와 함께 치솟은 불길은 낙엽을 태우며 순식간에 나무까지 휘감아 버립니다. 마을 4km 앞까지 불길이 들이닥치자보다 못한 주민들이 의용소방대를 조직해 화마에 맞서고 있습니다.

[민남기/삼척시 가곡면 의용소방대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70~80미터 전방에 불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뒤쪽에도 똑같이 불이 올라오고 있고.."

하지만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인 덕풍계곡과 바로 옆 마을 쪽으로 불길은 무섭게 다가오고, 여기가 뚫리면 백두대간인 경북 봉화도 위험해지는데, 산림청은 진화헬기를 울진 쪽으로만 집중 배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영만/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이장]

"오전에는 헬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불이 막 번지니까 빨리 헬기 투입을 해 달라고 몇 시간을 떠들어봤는데도 헬기가 투입이 안 됐어요."

산불이 지상 진화가 어려운 백두대간의 한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산속의 마을들은 언제 어떻게 피해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江原日報

2022년 03월 07일 (6면 (사회))

# “제발 헬기 좀 보내주세요” 지휘권한 이원화에 진화현장 혼란

## 진화헬기 배치 지연

산불 현장 지휘는 지자체장, 진화헬기 배치는 산림청장 권한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면서 도내 산불 진화 현장에 혼란이 이어졌다.

지난 4일 시작된 경북 울진과 강릉 옥계 산불이 인근 삼척과 동해 등으로 확산되며 산불지휘본부와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에는 헬기요청이 이어졌다. 옥계면사무소, 소방서, 경찰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등 주민들이 헬기로 물 한 번만 뿌려 달라고 요청했고 정일섭 강릉부시장까지 나서

## 진화 현장 지휘는 지자체장

## 헬기 배치 권한은 산림청장

## 산림청 “모든 헬기 투입 중 진화지역 중간 변경 어려워”

“성산 송암리에 주불이 진화됐다고는 하지만 비위가 많은 지형적 특성 때문에 비위밑에 진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형헬기로 물 한 번 더 뿌려 달라”고 했지만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는 난색을 표했다.

강릉시와 주민들의 요구에 산불지휘본부나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관계자들은 다들 속만 태우며 상황을 산

림청 쪽으로 전달할 뿐이었다.

삼척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6일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아산에 불이 번졌지만 헬기가 지원되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곳은 암벽지역으로 진화대원들이 올라갈 수 없어 산불헬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산림청은 이날 삼척·경북 울진에 50대의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날 오전 10시 삼척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의 상황보고 자료에서는 오전 7시 헬기 1대만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5일 최문순 지사와 가진 현장상황 보고에서 “당초

헬기 7대를 요청했지만 헬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진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산불 위기에 처한 응봉산과 덕풍계곡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자연이자 허파로 덕풍계곡을 잃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손실”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림항공본부 관계자는 “산불 규모가 크고 확산도 빨라 전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헬기가 투입돼 산에 물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침에 각 헬기별로 지역과 역할을 지정해 투입되면 (헬기들도 운영리듬이라는 것이 있어)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다”고 했다.

조상원·황민진·전명록기자

경향신문

2022년 03월 09일  
10면 (사회)

# 산불 진화 골든타임 지켜줄 ‘비상소화장치’ 늘려야

있고 없고 따라 초동진화 큰 차이  
최근 피해 최소화 결정적 역할  
동해안 설치 필요한 마을 2880곳  
개당 1000만원... 국비 지원 목소리

“산림에 인접한 마을에서는 비상소화장치가 생명줄과 같아요.”

2019년 4월4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에서 ‘전기불꽃’(아크)이 튀면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고성·속초지역으로 급속히 번지며 산림 1260ha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또 2명이 숨지고, 584가구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마을주민들이 아직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산불로 피해가 속출했을 당시 자체적으로 마을을 지켜낸 곳이 있었다. 고성 토성면 용촌리 ‘홍와솔 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산불 발생 불과 19일 전 마을 자체 경비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산불이 23가구가 거주하고 있던 이 마을로 옮겨붙기 시작하자 마을회장은 노약자들을 대피시킨 후 주민 10여명과 함께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 5시간가량 진화



강원 속초시 응골길에 있는 비상소화장치.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작업을 벌인 끝에 불길을 모두 잡았다. 이 마을의 주택 4채가 전소 또는 반파됐으나 나머지 19채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 마을 주민들은 당시 “비상소화장치가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장치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2019년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산불 피해 위험지수가 높아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마을은 2880개에 달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2019년 자체 예산으로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6개 시·군의 34개 마을에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했다. 2020~2021년 등 최근 2년 동안 70억원(국비 50%지원)을 들여 산림과 인접한 마을에 비상소화장치 820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나머지 2000여개 마을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은 “비상소화장치의 효과는 지난 4~5일부터 급속히 확산된 삼척·동해·강릉 옥계면 지역의 산불 진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강풍을 타고 넘어온 산불이 삼척 원덕읍 월전리, 산양리 등으로 확산되자 주민들은 2년 전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 초동진화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5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시 승지골로 확산될 때도 이 장치가 큰 역할을 했다.

소화장치함과 두루마리 호스(호스릴), 관창, 옥외 소화전 등으로 구성된 ‘비상소화장치’ 1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000만원가량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산불 등 위험상황이 초래됐을 때 효과적인 초동대응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17.5\*16.6)cm

## [동해안 산불] 동해시, 호스릴 소화전 등 비상 소화장치 확대



(동해=연합뉴스)유형재 기자 =강원 동해시가 산불로 되풀이되는 피해가 없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8일 동해시에 따르면 마을 산불 및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이동 경로에 있는 마을 곳곳에 초기 진화 장비인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5일 강릉 목계에서 시작된 산불이 거센 강풍을 타고 동해로 확산하면서 부곡동 일명 승지골 일원이 위험에 휩싸였으나 주민들이 이곳에 설치된 6개의 비상 소화장치로 진화 작업을 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시는 또 소방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구도심 주택가에는 간이 소화전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관광지를 중심으로 지능형 소화전 위치정보시스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동해시와 같이 산과 도심이 인접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의 산불재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풍이 부는 야간의 산불은 조기 진화하지 못하면 확산은 불가피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산불이 나면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2년 03월 11일  
26면 (인물)

# 비상소화장치로 화마에 맞서 마을지킨 주민들

## 동해·삼척지역서 사례 잇따라

도소방본부 6개 시군에 설치  
산불 피해 최소화 큰 몫 톡톡

산불로 인한 화마(火魔)가 덮치는 가운데서도 시민들이 비상소화장치로 직접 마을을 지켜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지난 5일 새벽 3시께, 동해 괴란동에 거주 중인 이봉희(62)씨는 강릉 옥계 산불이 동해로 번질 것 같으니 대피하라는 시누이의 긴박한 전화를 받았다. 곧장 남편 최승우(67)씨와 집 밖으로 나왔지만 이미 인근 산은 불지옥이나 다름없었다.

대피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인근에 설치돼 있던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 직접 불을 끄기 시작했다. 다른 주민들도 함께 호스를 잡고 합심했고, 결국 이들은 주택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아침 일찍 찾아온 이씨의 두 사위는 소화장치를 이용해 곳곳에 물을 뿌리며 재발화를 방지했다. 이씨는 “불을 봤을



◇동해의 한 시민이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해 주택 인근까지 번진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땀 무서웠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함께 합심한 주민들과 사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7시께 민기(52) 망상동 13통장이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에도 불길이 다가왔다. 해당 연립주택은 총 85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민 통장은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망상컨벤션센터로 대피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대피하지 않았다. 소방관에게 미리 배워둔 설명대로 관리소장과 함께 침착하게 비상소화장치로 화마에 맞서 싸웠다. 민 통장은 “산바로 밑에 가스탱크도 있어 정말

위험할 뻔했는데 비상소화장치 덕분에 큰 화를 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동해 발한동과 삼척 월천리 등에서 주민들은 비상소화장치로 직접 마을을 방어해 냈다. 주민들의 산불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도소방본부가 동해안 6개 시·군에 총 820개소를 설치해 둔 비상소화장치는 주민들의 용기와 합쳐져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박순걸 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올해에도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추가설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순찬기자 sckwon@

(17.5\*16.2)cm

## 15시간 동안 '비상소화장치'로 마을 지켰다...3곳 중 2곳 '미설치'



[앵커]

이번 동해안 대형 산불 당시 초기 진화 장비인 '비상소화장치'가 민가 피해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산불 취약지역 3곳 가운데 2곳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화로 강릉에서 시작된 산불이 동해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던 지난 5일 새벽.

민기 씨는 연립주택 관리소장과 함께 비상소화장치함에서 150m 길이 호스를 끌고 와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립주택 단지 안 LPG 저장소 앞까지 불길이 들이닥친 일촉즉발의 상황.

이들이 구축한 방화선 덕분에 8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연립주택을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민기 / 동해시 망상동 통장 : 비상소화장치가 없었으면 저희 LPG 저장고와 아파트가 화마에 휩싸일 수 있었는데...]

이 마을 주민들도 비상소화장치로 물을 뿌리며 무려 15시간 동안 산불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소방차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축사와 주택은 단 한 채도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김종섭 / 동해시 망상동 : 우리가 산불을 방어했죠. 안 그랬으면 두 집과 축사에 소가 50마리 있어요. 다 탔죠.]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과 호스가 미리 연결돼 있어 노즐만 돌리면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불이 났을 때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행정안전부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산불 취약 마을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만 2,800곳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마을은 지금까지 820곳에 불과합니다.

비상소화장치 한 대당 가격은 천만 원가량, 올해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추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 (음성변조) :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초동 산불 대응 효과가 확인된 만큼 비상소화장치를 확대 설치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 삼척 '비상소화전함' 피해 최소화에 한몫

강릉 방화 용의자 모친 숨져



삼척 '비상소화전함' 피해 최소화에 한몫 사진=강원일보DB

대형산불로 삼척지역의 260ha가 넘는 산림이 전소됐지만 한 건의 인명 피해 없이 주택 1채만 소실되는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었다.

삼척지역 대형산불에서 인명 피해가 최소화된데는 비상소화전함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강풍을 타고 불길의 확산됐지만 야간이라 소방헬기가 뜰 수 없는 위급 상황이 이어졌다.

산림 당국은 삼척 가곡천을 방어 저지선으로 구축했지만 언제 어디서 강풍을 동반한 불씨가 원덕읍 월천리를 비롯, 산양리, 노경리, 사곡리 등 민가까지 접근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예고됐다.

이에 야산과 인접한 마을 주민들은 설치된 비상소화전함을 직접 열고 100~200m 길이의 호스를 끌어내 민가와 인접한 야산 주변에 물을 뿌리는 등 응급처치를 벌였다.

이 비상소화전함은 2019년 동해안 산불 당시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홍와솔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경비 1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소화전으로 밤새 산불과 사투를 벌여 주택 23채 중 19채를 지켜낸 사실이 알려지며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삼척지역에는 2020년과 지난해 2년에 걸쳐 원덕지역에만 11곳 등 삼척 75곳에 설치돼 산불 등 비상상황 시 주민들이 직접 초기 진화를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민들은 "비상소화전함이 민가와 인접해 있는 야산 주변에 물을 뿌려 방어선을 구축하는 등 초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며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강릉에서는 옥계 산불 발화용의자의 어머니가 주택 화재 현장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1시8분께 산불로 번진 주택 화재 현장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던 집주인 김모(여·85)씨가 이날 오전 5시59분 사망했다.

황만진(hmj@kwnews.co.kr), 전명록(amethy@kwnews.co.kr), 김도균(droplet@kwnews.co.kr)

## 산불 피해지 김 총리 방문..신속 지원 약속



[앵커]

경상북도 울진에서 난 산불이 삼척시 원덕에 이어 가곡면으로까지 번져 8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11일) 동해안 산불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 등을 약속했습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부겸 국무총리가 강릉·동해 산불 현장을 찾았습니다.

2019년 산불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자격으로 동해안을 찾은 지 3년 만입니다.

불에 탄 산림과 주택 등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주민들은 화마가 마을을 덮쳤던 긴박했던 순간을 총리에게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현숙/동해시 망상동 : "(집이) 전소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저기 앞에서 울기만 했죠. 지금 산에도 어제 오후에 올라가 보니까 저희 선산도 다 탔더라고요. (저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김 총리는 집을 잃고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만나, 최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힘내시라고, 시장님도 저희도 (그냥) 운이 나빴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자고요.]"

김 총리는 또 효율적 진화 헬기 운용과, 산림 인접 지역 내 비상 소화장치 설치 지원 등 자치단체의 요구 사항을 수렴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지원할 수 있는 건, 이걸 어차피 이번에도 느꼈지만, (비상 소화장치) 그런 거는 일종의 사회 그거 (필수 시설)이라고 봐야 해요, 우리 그거 시설이니까...]"

강릉과 동해, 삼척에서 잠정 집계된 산불 피해는 산림 5,360헥타르와 주택 등 건물 155동, 이재민 121명.

정부와 지자체는 사유 시설 등 피해 내용을 신청받아 오는 18일까지 현장 확인한 뒤, 관계부처 사전 협의를 거쳐 다음 달(4월) 초에 복구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 “해 떠서야 소방차 진입”... 좁은 길·동시다발 화재가 산불 피해 키웠다 [현장+]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해질녘의 마을. 지극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딱 한 가지가 달랐다. 불길을 잡은 지 하루가 지났어도 여전히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재 냄새만이 큰불이 다녀갔음을 알리고 있었다.

불이 마을을 덮친 건 순식간이었다. 5일 새벽 3시쯤 “불이 났으니 대피하라”는 마을 방송이 악몽의 시작이었다.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50대 김모씨는 몸만 피해 집 밖으로 나온 뒤 그저 멍하니 불이 펜션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바라봤다.

펜션 진입로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다. 소방차가 좁은 도로를 들어오는데 애를 먹으면서 펜션 불을 끄기까지 2시간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간 펜션 5채가 전소했다. “소방차가 좁은 길에 들어오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느라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새벽 3시에 불이 났는데 해가 떠서야 진입했으니까. 그간 불붙은 펜션은 다 탔죠 뭐.” 김씨와 함께 펜션을 운영하는 남편 강모씨가 푸념했다.

근처 소방전에 호스를 연결해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 소방 인력들은 결국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불을 껐다.

지난 5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시 만우마을 펜션의 진입로.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도로라 소방차가 들어오는 데 애를 먹었다. 동해=이희진 기자

김씨 부부는 갑작스레 발생한 피해에 앞이 막막하다. 김씨는 “당장 5월부터는 성수기인데 그때까지 복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매출에 타격이 컸는데 펜션까지 타버리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씨네 펜션은 당장 지난 주말 5팀의 예약이 잡혀있었지만 산불로 모든 게 형클어졌다. 펜션 내 짐질방도 만들려 땅을 갈아뒀으나 모든 계획은 백지가 됐다.

화재는 김씨 삶을 덮쳤다. “새벽에 나와서 얼마나 울었는데요. 목이 다 쉬었어요. 이런 재난은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죠. 눈앞에 나타난 시뻘건 화마와 시꺼먼 연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눈도 못 뜨겠더라고. 언제든 이런 ‘화가 나에게 닥칠 수 있구나 싶고...”

7일 소방과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 피해는 소방인력들이 제때 화재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더욱 커졌다. 산불 피해가 동해안 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덮치면서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고, 시골 특성상 산길·좁은 길이 많아 소방차가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가 살고 있는 만우마을뿐 아니라 동해시 묵호 등대마을 등 다른 마을에서도 소방인력의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묵호항이 흰히 내려다보일 정도로 지대가 높은 등대마을에 사는 이형구(49)씨도 이번 화재로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을 잃었다. 가끔씩 친구들이 놀러오면 별장처럼 쓰던 집이었지만 이전 추억이 됐다. 불이 등대마을로 옮겨붙은 건 5일 동틀녘이다.

이씨는 “불이 불기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근처 카페가 전소했다”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뛰쳐나와 집에서 물을 길어 불길을 막아보려했지만 바람을 탄 불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소화전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아니 하다 못해 소화호스라도 있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며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오기 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었던 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만우마을과 마찬가지로 등대마을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데도 신고 후 1시간정도가 걸렸다.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다보니 다른 지역을 들렀다 오느라 늦은 것이다. 이씨는 “소방차가 도착한 후 공무원들이 늦게 온 이유를 설명해줬다”며 “우선순위가 있으니 이해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소방’을 너무 믿다 피해가 커진 셈”이라고 했다.

묵호동에 위치한 창호초등학교에서도 교직원 10여명이 소방 인력들이 오기 전 불을 끄는 일이 있었다. 이들은 동해시 내 소방력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 학교까지 소방인력들이 빨리 오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근처에 화재가 발생하든 소식을 들은 뒤부터 학교에서 대기했다. 불길이 학교 뒷산을 넘어 학교로 향할 때 행정실장은 소 화전에 호스를 길게 이어 교사들과 산으로 향했다. 교직원들은 불길이 학교 담장을 넘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물을 뿌렸고 다행히 불길을 잡았다. 불로 학교 야외 잔디밭 10㎡ 정도만 탔을 뿐 그 외의 피해는 없었다.

**“도깨비불이 와다다, 불기둥이 헬기 높이까지”**

“와~ 진짜 불이 ‘도깨비불’마냥 와다다다 쏟아졌더니깐. 과장 조금 보태서 불기둥이 저기 헬리콥터 높이까지 올라갔어.”

6일 오전 강원 동해시 괴란동에서 만난 김창영(73)씨는 손으로 다 타버린 야산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불이 코앞까지 번졌던 악몽 같은 상황이었다. 이 동네 야산들은 군데군데 나무들이 다 타버리고 주택 2채는 불길에 전소됐다. 불이 꺼진 이 날 오후에도 탄내는 사라지지 않았고 눈앞에 재가 날아다녔다. 지난 5일 새벽 1시20분께 옥계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산불이 났고, 이 불은 4시간여 만에 동해시까지 번졌다. 김씨는 20년 가까이 일군 포도밭이 불에 다 타버릴까 봐 어제 종일 밭을 동동 구르며 직접 밭에 물을 뿌렸다. 김씨는 “포도는 심은 지 4년이 돼야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데, 불에 다 타버리면 4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온종일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다”며 “5일 새벽부터 포도밭에 나가 불이 옮겨붙기 쉬운 냉해 방지용 지푸라기부터 다 풀었다. 생명줄을 지킨다는 심정으로 온종일 밭에 물을 뿌렸다”고 말했다.

거센 불길을 막지 못해 다 타버린 집을 보며 망연자실 한 사람도 있었다. 김만식(54)씨는 “태어나고 자란 집이었다. 다 타버렸으니 당분간 시내에 있는 동생 집에 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뒤를 쫓아온 하얀색 강아지도 온몸이 검은색 재로 얼룩덜룩했다. 김씨는 울먹이며 “강아지 사료까지 다 타버렸다”고 했다.

축사에 소 30여마리를 키우는 한 주민도 불길이 갈피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이곳저곳으로 옮겨붙자 축사에 있는 소들을 지키기 위해 직접 물을 뿌리며 필사적으로 버텼다. 이 주민은 “불길에 너무 놀랐지만, 축사에 있는 소들을 지키려고 호스로 물을 뿌리며 불이 옮겨붙지 않게 안간힘을 썼다”고 말했다.

동해시 망상동 만우마을에서 만난 주민들도 지난 5일 새벽 상황을 떠올리며 진저리를 쳤다. 만우마을은 옥계에서 불이 난 뒤 불과 1시간30여분인 새벽 2시40분께 대피령이 내려진 동네다.

김영기(78)씨는 “새벽에 대피하라는 안내를 받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는데 해가 뜨고 다시 돌아보니 멀쩡한 집이 별로 없었다.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옆에 있던 김순우(55)씨도 “진입로가 좁아 큰 소방차는 들어오지도 못했다. 주민들이 물통이를 들고 다니면서 불을 꺼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산불로 주택 뒷산이 까맣게 타버린 여영구(59)씨는 “인근 동네에서 산불이 났다는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어머니가 걱정돼 평택에서 한걸음에 달려왔다. 뜨거운 열기와 뿌연 연기로 소방차도 근처까지 왔다가 다 대피했다. 부모님 때부터 살던 고향 집인데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동해 유명 관광지인 논골담길 인근 산재골 일대도 화마가 활취고 간 흔적으로 처참했다. 산불이 옮겨붙어 새까맣게 타 버린 집 곳곳에선 메케한 냄새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계속 피어올랐다. 박분옥(80)씨는 “산불이 온다고 다 피하라고 해서 체육관으로 도망치듯 대피했다가 돌아왔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난리통에 세간살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이틀날인 이날 동해시는 산불 진화헬기 30대 등 장비 273대와 공무원 380명 등 인력 2246명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주택 94곳이 화재 피해를 보았으며 산림 2100ha가 불에 탄 것으로 동해시는 집계하고 있다. 3년 전인 2019년에도 강릉시 옥계에서 난 산불이 동해까지 번져 산림 1260ha와 주택 등을 태워 610억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후 4시께 찾은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서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동해시 주민 임시대피시설인 이곳에 오후 2시에 입주했다는 강희덕(70)씨는 전 장관을 만나 “어제 새벽 3시50분께부터 집이 있는 만우동에 불길이 강하게 일기 시작했는데도 대기하던 소방차 4대는 호스 연결도 하지 않았다. 물을 뿌려야 한다고 항의했는데도 요지부동이었다”고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은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답변하겠다”라는 답을 했다고 강씨는 전했다.

글·사진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 '300m 가는데 1시간'...길 좁고 소화전 없어 산불 키웠다



### [앵커]

강풍에 산불이 번진 동해시내의 한 마을에는 소화전이 없어 주민들이 초기 진화조차 못한 채 삶의 터전이 불 타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비좁은 도로 탓에 소방차가 300m를 가는데 1시간이 걸리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산불 현장에서 3km 떨어진 주택가에 갑자기 불길의 치솟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해 치솟는 불길을 제압했지만 불길은 소방차보다 빨리 다른 곳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5일 동해 산불 당시 강풍에 날린 불똥 때문에 주택 20여 채가 불 탔습니다.

### 산불 목격자

"이 아래가 타면서 이곳으로 (불씨가)날라 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마을에 불이 번졌지만 소화전조차 없어, 주민들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 조영재 / 강원 동해시

"소화전이라도 있으면 아무 곳이나 대고 쓰고 그럴텐데, 이런 건 안 탔을 건데 다 탔으니까..."

산불이 번진 이 마을 진입도로는 이렇게 승용차 1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소방차가 불 탄 건물 앞 300m를 이동하는데만 1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 피해 주민

"(도로를 넓혀 달라고)건의를 그만큼 했어요. 했는데도, 머 그냥 계속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결국 이렇게..."

어렵사리 소방차에 소화전을 연결했지만, 상수도 사용량이 많다보니 이번엔 물이 끊겼습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수십미터 떨어진 하천까지 호스를 연결했지만 산불은 이미 마을 전체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